

‘새우잡이배’ 인신매매 배경과 실태

취업을 하기 위해 전국의 역·터미널 등지에서 배회하는 남자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고 피어, 이들을 전남 서남해안 섬지역의 새우잡이배(속칭 멧탕구리배)나 김 양식장, 염전 등에 팔아 넘겨온 ‘현대판 노예상인’들이 지난 15일 경찰에 불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임자룡(45·전남 목포시 산정동 12-98)씨 등 이들 일당은 수배된 30대 남자 ‘행동책’ 2명, 40대 여자 ‘유인책’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88년말부터 부산 진역 등 전국의 역, 터미널 등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떠도는 20~40대 남성들에게 접근, “좋은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며 피어 전남 신안일대의 새우잡이배와 김 양식장에 팔아 넘겨 그동안 모두 3천만~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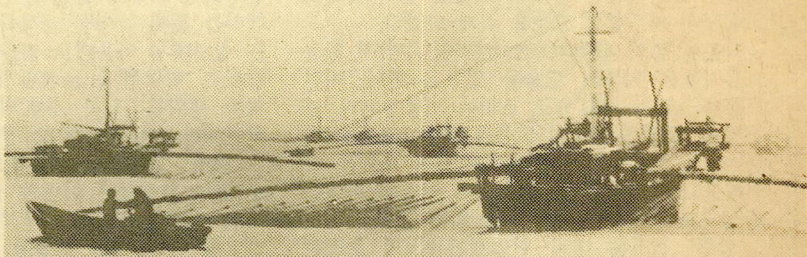
이들 일당의 유인망에 걸려든 피해자는 경찰조사

구형이 어려운 현행법의 취약성 등이 이같은 인신매매의 악순환을 되풀이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영세 수산업계의 실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선주의 경우 대부분 3~6개월분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지않은채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선주들에 따르면 70년대 이후 공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이 학업, 취업 등을 위해 어촌을 빠져나감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온 노동력이건 마다 처지가 못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원이 납치, 유인돼 온 탓으로 이들을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인신매매범에게 걸려든 사람들이 선원으로 일해온 새우잡이배(위·광주일보 전 송). 범인 일당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15일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일보 전 송>

일손 모자라 ‘불법’ 알면서 고용

동력없는 ‘멧탕구리배’ 폭풍맨 속수무책 하루종일 감시 눈길...폭행·살인도 잦아

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몸값’ 30만~60만원 외에도 밥값, 숙박비 등 명목으로 한 사람 앞에 평균 1백만~3백만원의 빚을 떠넘기며 선주 등 매수자들에게 3~6개월분의 임금을 미리 받아내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왔음이 드러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백남룡(42·부산시 서구 충무동3가 3)씨의 경우, 지난 88년 12월 부산에서 이들에게 속아 임씨 집에 끌려온 뒤 한달 남짓 감금돼 있는 동안 밥값, 숙박비 등으로 2백80여만원의 빚을 지고 지난해 1월 중순 신안군 임자도에서 온 선주 장문용씨에게 1백만원에 팔려갔다. 백씨는 같은 해 7월 임씨에게 빚 청산으로 1백만원을 더 뜯기고 12월 선주와의 계약기간을 마친 뒤 목포시내 한 여인숙에 머물던 중 임씨 일당으로부터 “나머지 80만원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두번째 끌려가 지난해 12월13일부터 15일 임씨 일당이 검거될 때까지 다시 2백60여만원의 빚을 지고 팔려갈 날만 기다리다 구출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영세선주 등 수요자가 끊이지 않고 △학력 및 성장환경 등으로 이같은 잡역외에 별다른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자포자기적 생활방식 △직업안정법 위반자 등에 대해 중형

고용된 선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도망치다 잡혔을 경우 폭력 등 가혹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신안군 자은면 근해에서 새우잡이배를 하던 원양호에서 박홍식(30)씨 등 4명이 고용된 선원 구희준(20·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씨를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체에 돌을 묶어 수장시킨 사건이 발생한 등 살인과 폭행사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멧탕구리배’는 대부분 15~30t 규모의 폭조 부동력선으로 일출항 때는 예인선이 끌어주어야만 이동이 가능한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순전히 선원들의 노동력에 의존해 운항되고 있다. 때문에 선상의 작업환경이 극히 원시적일 뿐만 아니라 폭풍우를 만났을 경우 쉽게 침몰하는 등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해 6월6일 신안군 임자면 제원도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해주호 등 멧탕구리배 4척이 폭풍우로 침몰, 선원 정태인(42·전북 남원시)씨 등 15명이 몰사한 사고는 이들의 삶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 87년 7월 태풍 ‘셀마’ 때도 이 지역에서 모두 12척의 멧탕구리배가 침몰, 선원 53명이 폐족음을 당했으나 이들 대부분의 선원마저 제대로 밝혀지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수산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현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서남해안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산, 부산, 속초 등 전국 어느 항·포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선주를 낚아내 찾아내 처벌할 경우 우리나라 영세 수산업은 사실상 발이 묶이게 된다는 것이 강력단속을 펴지 못하는 경찰의 속사정이라고 수사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해 8월 전남도경이 인신매매 단속을 위해 신안, 영광 등지의 외지인 취업자 3백8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중 16명만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계속 일하겠다고 응답해 ‘감금상태에서 강제노역’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광주 북부서의 한 수사간부는 “단순노역외에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어촌의 수요자들에게 합법적 취업과 구인을 연결시켜 줄 공신력 있는 인력충원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섬 지역 인신매매사범은 경찰의 힘만으로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김권 기자>